
행정안전부 업무보고

2025. 12. 17.

순 서

I . 일반 현황	1
II . '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 방향 ...	2
III . 중점 추진과제	6
IV . 주요 쟁점이슈	20

I. 일반현황

1 기구 및 조직 현황

❖ 1차관 1본부 7실·1대변인 28국·관 1상황실 1단 117과, 10소속기관



2 인원 현황

구분	직급별	계	정무직	고공단	3.4급	4급	4.5급	5급	6급이하	기타
합계	정원	3,867	9	63	45	165	177	772	2,103	533
	현원	3,729	9	62	43	153	182	695	1,940	645
본부	정원	1,681	3	38	33	88	150	540	765	64
	현원	1,664	3	43	39	93	137	526	757	66
소속기관	정원	2,186	6	25	12	77	27	232	1,338	469
	현원	2,065	6	19	4	60	45	169	1,183	579

3 예산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분	2025 본예산 (A)	2026년 본예산 (B)	증감 (B-A)	(B-A)/A
계	72,083,936	76,905,548	4,821,612	6.69
■ 사업비	4,636,241	7,119,600	2,483,359	53.56
AI 민주정부	821,250	1,266,066	444,816	54.16
지역균형성장	1,430,043	2,611,120	1,181,077	82.59
국민안전	1,668,079	2,535,129	867,050	51.98
사회통합 등	716,869	707,285	△9,584	△1.34
■ 비사업비	67,447,695	69,785,948	2,338,253	3.47
교부세	67,038,505	69,354,953	2,316,448	3.46
기본경비	39,671	39,778	107	0.27
인건비	369,519	391,217	21,698	5.87

Ⅱ. '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 방향

① '25년 주요 성과

❖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가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국정운영의 기틀을 다지는데 총력 지원하는 한편, AI 대전환·극한기후 대응 등 시대적 과제 추진 기반 조성에 최선

□ 새 정부 성공적 출범 및 헌정질서 회복 총력 지원

- 정부조직 개편 마무리 및 국정과제 소요 조직·정원 적극 지원, 국민 임명식 등 민주주의 회복을 향한 국민적 열망 뒷받침

- ✓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,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 개편(10.1.) / 행안부 경찰국 폐지(8.26.)
※ 해수부 부산 이전, 국민통합위원회 새 출발 등도 차질없이 지원
- ✓ 산업안전환경 개선, 재외국민 보호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보강
※ 근로감독관(300명 증원 완료, '25.12월 700명 및 '26년 1,000명 추가 증원 예정), 경찰청 산재 수사전담팀(20개), 재외공관 재외국민 보호인력(22명) 등 증원
- ✓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및 운영 실무 지원('모두의 광장' 등)
- ✓ 시장·군수·구청장 국정설명회 개최(11.12.) 및 지방공무원 국정철학 교육 실시(총 21회)
- ✓ 광복 80주년 경축식 및 국민임명식 성공 개최(8.15.)
- ✓ 민주화운동기념관(남영동 대공분실) 개관(6.10.) 및 빛의 연대기展 개최(12.3.~)
- ✓ '대한민국 새단장' 실시, 혐오·비방 현수막 가이드라인 시행(11.18.) 등 국민통합 노력
- ✓ 경주 APEC 안전관리 지원, 93개국 외교사절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(12.4.)

□ AI 민주정부 구현 토대 마련

- 이재명 정부의 정부혁신전략을 마련하고, 공공 AX 및 대국민 행정 서비스 질적 고도화를 위한 기반 구축

- ✓ 「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*」 발표(12.3.) 정부혁신박람회 개최(12.3. ~ 5.)
* 4대 전략(참여 소통, 기본사회, 공직혁신, 공공 AX) + 12대 추진과제
- ✓ '범정부 AI 공통기반' 및 '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' 시범 운영 시작(11.25.)
- ✓ AI·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발굴 및 10개 선도과제 선정(12월)
- ✓ 기업의 공공데이터 확보 및 활용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센터 개소(7.25.)
- ✓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'정부24*' 개통(7.10.), 모바일신분증 민간 개방 확대(7.23.)

□ 지방자치 30년 계기, 미래 도약 준비 박차

- 향후 지방정부가 소멸위기를 극복하고, 주민 중심 자치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와 대등한 파트너로서 국가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반 강화

- ✓ 민선 지방자치 30년 5대 권역별 간담회 개최 및 「지방자치 미래비전*」 발표(11.19.)
* 3대 목표 : ①주민주권 지방정부 구현, ②중앙-지방 동반자적 관계 확립, ③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역역량 강화
- ✓ 대통령 주재 '중앙지방협력회의'(11.12.), 장관 주재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(7회)
- ✓ 주민자치회 설치·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「지방자치법」 개정 추진(법사위 통과)
- ✓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를 위한 「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대책」 발표(11.26.)
- ✓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「지방기금법」 개정 추진(법사위 통과)
- ✓ 생활인구등록제 등 생활인구 확대 지원 참고 조례안 배포(8.25.)
- ✓ 고향사랑기부 모금액 및 기부 건 수 증가
※ 1~11월 모금액(억원) : ('24) 445.2 → ('25) 743.9 / 1~11월 모금건수(만건) : ('24) 35.4 → ('25) 63.9

□ 민생 및 연대·협력 가치 회복 전력

-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성공적 지급 등 민생회복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, 지난 정부에서 약화된 사회연대경제 회복 기틀 마련

- ✓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완료(1차 99%, 2차 97.5%)
※ 소비자 심리지수(11월) 112.4로 8년만의 최고치 기록
- ✓ 지역사랑상품권 국가지원 의무화 등 「지역사랑상품권법」 개정(8월)
- ✓ 보통교부세 '지역사랑상품권' 및 '사회연대경제 지원' 관련 수요 신설(10월)
- ✓ 행안부 조직개편을 통해 '사회연대경제국' 신설(11.25.), 「사회연대경제기본법」 제정 추진
※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「마을기업법」 제정(8.14.)
- ✓ 새마을금고 체질 개선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개혁방안 마련(10.29.)

□ 국가 제1책무인 국민의 안전·생명 보호 최선

- 이상 기후로 인한 재난 신속 대응, 사회적 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,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에 범정부적 역량 결집

- ✓ 폭염*·호우** 등 총력 대응으로 인명피해 최소화
* 역대 평균최고기온(30.7도) 등에도 불구하고, 사망자 수 전년 대비 14.7% 감소
** 하천·계곡 불법 점용시설 744개소, 빗물받이·우수관로 408만 개소 선제적 정비
- ✓ 「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」 마련(10.2.), 「산불종합대책」 마련(10.22.)
※ 행안부·산림청·소방청 등 '범정부 산불진화자원 운용협의회' 운영
- ✓ 사회적 참사 유가족 치유 대화(7.16.),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(9.1.~11.6.) 및 추모행사(10.29.) 실시
- ✓ 재난피해 지원대상 확대(중소·소상공인 시설복구 및 경영안정 추가 등)
- ✓ 「약취·유인 방지 어린이 안전대책」 발표(11.11.), 고령보행자 안전시설 확충(26개소)
- ✓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수당·승진 확대 등 역량 강화 방안 마련(9.9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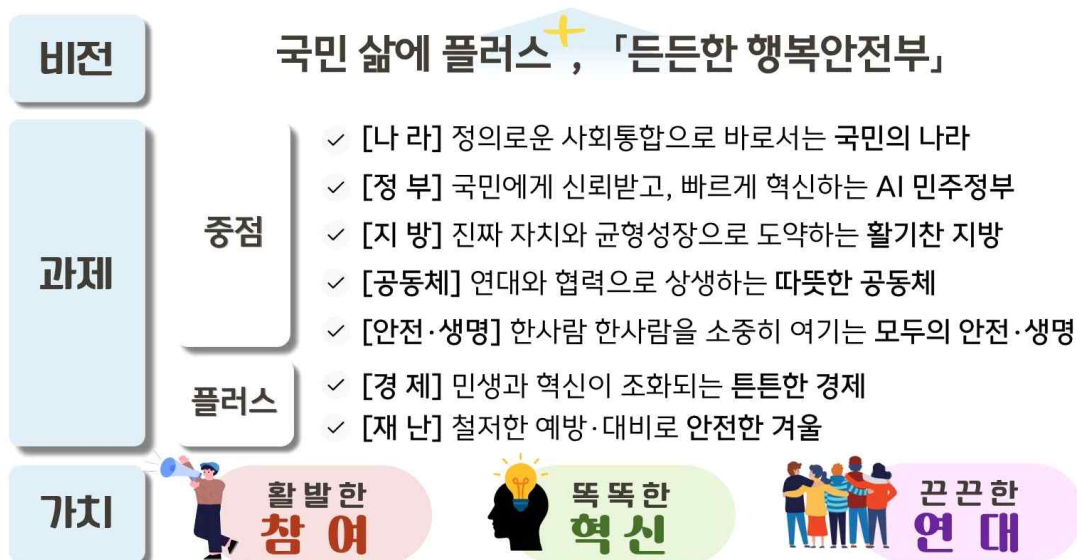
2 정책여건 및 보완 필요사항

- 사회 전 분야에 걸친 AI 혁명 시대를 맞아 'AI 3대 강국' 실현을 위해 성공적인 공공 AX 중요성 부각
- 양극화 심화, 세대 간 인식 격차 확대 등 갈등요소를 극복하고, 국력 결집을 통한 미래 도약 기틀 마련 필요
-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위기 극복, 이상기후 및 잠재위험요소로부터의 국민 안전 확보 등 각종 난제에 대한 실용적·창의적 해법 요구

⇒ 중앙-지방 간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국정운영 성과 창출 견인

3 향후 업무추진 방향

- 국정운영의 중추부처로서 나라-정부-지방-공동체-개인(안전·생명)에 이르기까지 다층위적 정책 발굴·추진
- 참여·연대·혁신의 가치를 정책 곳곳에 내재화하고, 지방소멸위기 극복, 공공AX 등 시대적 과제에 대한 해법 도출
- 사회적 약자 배려와 국민 생명 보호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임을 깊이 인식하고 두터운 보호 대책 마련



국민이 주인인 나라,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

국민 삶에 플러스+, 든든한 행복안전부

중
점
과
제

나라

정의로운 사회통합으로 바로서는 「국민의 나라」

- 1 정의로운 사회통합 실현

정부

국민에게 신뢰받고, 빠르게 혁신하는 「AI 민주정부」

- 1 시민참여 활성화 기반 조성
- 2 공공 AX로 서비스 혁신 가속화
- 3 적극적 마인드로 문제를 해결하는 공직사회 구현

지방

진짜 자치와 균형성장으로 도약하는 「활기찬 지방」

- 1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 대전환 추진
- 2 소멸위기 극복을 넘어 골고루 잘 사는 균형성장 견인

공동체

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하는 「따뜻한 공동체」

- 1 사회연대경제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
- 2 서로 보듬고 희망을 키우는 마을공동체 조성

안전·생명

한사람 한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「모두의 안전·생명」

- 1 생명존중사회 구현 초석 마련
- 2 안전약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망 구축
- 3 복잡·대형화되는 재난에 대한 대응역량 제고

플러스+
과제

1. 민생과 혁신이 조화되는 「튼튼한 경제」
2. 철저한 예방·대비로 「안전한 겨울」

Ⅲ. 중점 추진과제

[나 라] 정의로운 사회통합으로 바로서는 「국민의 나라」^[국정과제10]

- ✓ 진정한 사회통합은 민주주의와 역사에 대한 확고한 인식 위에 가능함을 되새기며, '빛의 혁명' 계승과 책임있는 과거사 해결 적극 추진

□ '빛의 혁명' 계승과 K-민주주의 확산

- (정신 기억) 비상계엄 저지·헌정질서 회복을 기리는 「^{가칭}국민주권의 날」 기념 방안* 검토, '빛의 혁명' 구술 채록('26~'27년) 등 추진
 - * ①명칭 공모, ②국가기념일 지정 등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실시
- 민주화운동기념관(남영동 대공분실) 원형 복원 및 국내외 교류거점으로 활용
- (민주화운동 예우 강화) '23년 이후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재개('26.6월) 및 포상을 확대*하고, '빛의 혁명' 기여자 대상 인증서 발급 추진('26.上)
 - * (기존)민주화운동 공적자 → (추가 확대)민주화운동 헌신 단체 및 빛의 혁명 기여자

□ 국가폭력 치유 및 책임 있는 과거사 진상규명

- (국가폭력 치유)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* 범부처 합동 국가 사과 및 피해회복 지원입법 추진('26년),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시설 조성(~'27년, 대전 동구)
 - * 선감학원^{행안부}, 형제복지원·서산개척단·영화숙·재생원^{복지부} 등
- (과거사 해결) 미해결 과거사 진상규명 적극 추진(간토사건 : 법 제정 완료 / 우키시마호 사건 : 명부 분석 중, ~'26.下), 제3기 진화위 출범 지원('26.2월)
 - ※ 4.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 연장(~'26.12월), 5.18 관련자 보상기준 개선(성폭력 피해자 등 포함 '26.6월)

□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완수

- (중수청 설치) 검찰청 폐지 등 「정부조직법」 개정('25.10월)에 따라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수청의 안정적 출범('26.10월) 지원

□ 혐오·소외 없이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조성

- (혐오 현수막 근절) 「옥외광고물법」(개정안 법사위 계류 중)에 근거하여 혐오 현수막 조치 확행, 정당현수막에 대한 특례 폐지 및 관리지침 마련('26.1분기)
 - ※ 선관위와 협의, 「정당법」 개정 지원 및 제9회 지방선거 현수막 질서 확립
- (외국인주민 지원) 유학생·계절근로자·이주배경 아동 등 정착 우수사례 발굴, 외국인주민-지역 주민간 상생 인프라(공동육아, 문화체험 등) 구축 추진
 - ※ 외국인 대상 재난안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재난정보 앱(Emergency Ready App) 제공 언어 확대(5종→19종, '26.3월)

[정 부] 국민에게 신뢰받고, 빠르게 혁신하는 「AI 민주정부」

1 시민참여 활성화 기반 조성 [국정과제9 · 14]

□ 국민 참여·소통 통합적 관리·지원체계 확립

- (참여 기반 구축) 「^{가칭}시민참여기본법*」 마련('26.上)으로 정책 참여 보장,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전담기구 「^{가칭}국가시민참여위원회**」 설치('26.下)
 - * 국가·지방정부의 예산 지원 및 전담 기구 마련, 시민사회 기본계획 수립 의무 등을 규정
 - **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, 민주시민교육, 시민사회 기본·시행계획 심의 등 수행
- (국민소통 플랫폼) 하나의 창구에서 국민 의견·제안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AI기반 「^{가칭}모두의 광장*」 구축, 국민 제안을 정책화하는 정책 큐레이터** 운영
 - * (예시) ①AI를 활용하여 정책 제안시 소관 분야·기관 추천, ②국민신문고·청원24·정보공개포털 등 타 시스템 연계, ③유사 정책 제안 사례 및 결과 공유 등
 - ** 정책 큐레이터가 질문·제안·토론 내용 분석 후 정책의제 도출

□ 정보공개 및 국민청원 접근성 제고

- (정보공개 확대) 비공개 사유 구체화*로 남용 방지, 정보공개포털 UI/UX 개편 등 국민의 알 권리 증진 도모
 - * 의사결정과정 등 소극적 정보공개 원인이 되는 비공개기준 구체화(「정보공개법」 개정안 발의 '26.上)
- (청원 편의 개선) 지능형 검색 기능 탑재로 유사 청원 신속 안내, 청원 대상 기관 선택 도우미 제공으로 오접수·재접수 불편 해소

2 공공 AX로 서비스 혁신 가속화 [국정과제24]

~'25년까지	'26년부터~
✓(대국민) 디지털 기반 맞춤형 공공 서비스가 확대되었으나, 국민의 신청이 전제되고 절차도 여전히 복잡	✓(대국민) AI가 공공서비스에 내재화되어 국민이 일상에서 '쉽게·즉시·편하게' AI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
✓(행정내부) 민간 AI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나, 보안 등의 우려로 행정 적용 한계	✓(행정내부) 높은 보안 속에서 내부망에 민간 AI를 도입하여 공공분야 생산성 향상

□ AI 기반 대국민 서비스 혁신

- (AI 국민비서) 민간(카카오, 네이버 등) AI 에이전트와 공공서비스를 연계 하여 국민의 각종 생활·행정 업무를 간단한 '대화'만으로 실행·처리
 - ※ AI와 대화만으로 전자증명서 발급, 유희 공공자원 예약 시범 서비스 시작('26.2월)

- (AI 정부24) 분산된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일상 언어로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안내하는 **생성형 AI 기반 지능형 검색 서비스** 제공

▶ (예시) (이용자) "다음 주에 해외여행 가는데 여권을 잃어버렸어" → (AI정부24) "긴급 여권발급 신청하시면 48시간 이내 발급이 가능합니다. 아래 링크로 바로 신청하세요."

- (혜택 알리미)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알림 범위 확대*, 요건 충족시 신청하지 않아도 혜택** 자동 제공 시범 구현('26.10월)

* ('25년) 6,000여종 → ('26년) 7,500여종(+1,500종, 확대대상 소상공인, 무주택자, 금융취약계층 등)

** 임산부 교통비 지원(경가인천천안), 다자녀 양육 바우처 지급(안산과천시산) 등 시범사업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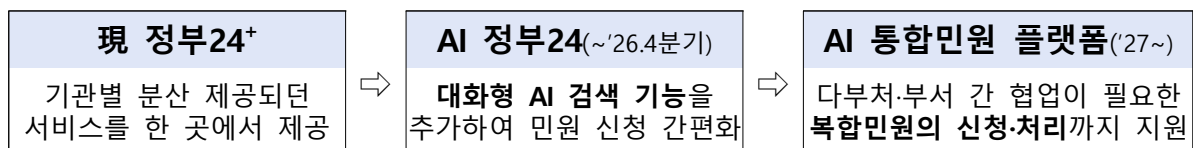
- (모바일신분증) 발급·사용 가능한 민간 앱 범위 확대(6개→10개)로 국민 편의성 제고, 안면인식 모델에 AI를 적용하여 정확도·보안성 개선

□ '원스톱'으로 민원 처리·해결

- ('단번에 처리' 원칙) 원스톱 민원 표준업무절차 마련,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제출서류 간소화, 법정민원 신설시 설계 단계부터 원스톱화 추진 등

※ 하나의 창구 또는 주무 부서 전담 처리 원칙 명시(「민원처리법」 개정 추진, '26.上)

- (원스톱 창구 강화) 오프라인 복합민원(인허가 등) 해결 위한 전담 부서 운영 확대, 온라인 AI 에이전트가 복합민원 신청·처리도 지원하는 AI 통합민원 플랫폼 개발



- (시범사업) 생활밀접 복합민원 5종*을 선정하여 우선 개선 추진('26.上)

* 현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및 이·미용업 영업신고 우선 검토, 3종 추가 발굴 예정

▶ (예시) 現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최대 9개 기관, 8회 방문 → 시·군·구청 원스톱창구 1회 신청

□ AI·데이터에 친숙한 유능한 정부 촉진

- (AI 도입·확산) 공공 AX를 위한 「30대 핵심과제*」 선정 및 추진('26.上), 범정부 AI 공통기반과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**을 쏘 중앙·지방정부로 확산('26년)

* AI정부24(행안부), AI를 활용한 대국민 납세서비스혁신(국세청) 등 30개 과제

** 행안부, 과기부, 식약처 등 3개 기관 시범운영(~'26.2월) 후 단계적 확산 추진

- (데이터 공유) 기관간 원천데이터 공유·활용 촉진(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확장, '26.上), 개방 공공데이터의 AI 활용을 위한 AI-Ready 시범적용*(~'26년)

* 교통안전 실시간 신호등 정보('26.上), 산업재해 사고정보 및 예방조치 정보('26.下) 등

<재해복구(DR)·보안 체계 강화>

- ▶ (재해복구체계 개선) 중단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요 행정시스템 이중운영체계* 구축, 데이터센터 설비 기준(배터리·전기·항온항습 등)을 민간 수준까지 강화('26.2월)

* ▲주요 시스템 97개 정보화전략계획(ISP) 수립('26.上, 403억), ▲디브레인, 인터넷 우체국 등 13개 핵심 시스템 Active-Active DR 체계 우선 구축('26년, 2,120억), ▲그외 121개 시스템 스토리지 DR 구축 시작('26년, 911억)

- ▶ (정보보호 예산·인력 확충) 정보화 예산 중 15% 이상을 정보보호 분야에 의무적으로 투자, 정보화 인력 대비 10% 이상으로 정보보호 인력 보강(▲중앙부처: '26.6월, ▲지방정부: '26.12월)

③ 적극적 마인드로 문제를 해결하는 공직사회 구현 [국정과제13]

□ 성과로 보상받고, 부당으로부터 보호받는 공무원

- (신상필벌 원칙 확행) ^{신상}‘실질 해결’에 기여한 기관·담당자 포상 확대, 혁신적 성과 달성시 ‘특별성과 포상금*’ 지급, ^{필벌}허위보고·비위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

* 특별한 업무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최대 3,000만원의 포상금 지급('26년)

- (공무원 보호) 반복·중복 민원에 대한 기관장의 예방 노력 법제화 (「민원처리법」 개정 추진, '26.1월~), 부당한 정보공개청구* 처리 방안 마련('26.上)

* ①욕설·협박·성희롱 내용을 포함하여 청구한 경우, ②타인을 비방·모욕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리는 내용으로 청구한 경우, ③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를 반복하는 경우 등

□ 유연한 문화 속에 스마트하게 일하는 공무원

- (AI 역량 제고) 4단계 공공 AI 역량 트랙* 개발 및 AI 역량 인증체계 운영, 기관별 AI 전환 주도 인재인 ‘AI 챔피언’ 2만명 양성(~'30년)

* (트랙1) 전직원 AI활용, (트랙2) 실무자 AI융합, (트랙3) IT담당 AI개발, (트랙4) IT담당고급 AI마스터

- (공직문화 개선) 저연차 공무원(MZ세대)이 공직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행·제도 개선*, 열린 소통 문화** 정착 등 조직문화 혁신 추진

* '간부 모시는 날' 관행 근절 제도화 / ** 온나라 익명게시판 개편('26.上), 역사사지 토론회('26.下) 등

[지 방] 진짜 자치와 균형성장으로 도약하는 「활기찬 지방」

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 대전환 추진 (국정과제49 · 52 · 53)

구분	현재(As-Is)	미래 비전(To-Be)
행정체제 개편	• 수도권 쏠림 등 일극체제	▶ • 통합특별시 전폭 지원 등 다극체제 구현
권한 확대	• 단편적·분절적 국가 권한이양	▶ • 지방정부 권한을 종합적·포괄적 보장
주민 참여	• 지역문제에 대한 단순 의견 제시	▶ • 삶과 직결된 정책을 직접 결정

□ 새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

<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 출범 전폭 지원>

- (통합 지방정부 지위 강화) 통합 지방정부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*를 부여해 초광역단위 국가균형발전체계 구축

* 특별시 명칭 부여, 정무직 부단체장 신설 등 서울시에 준하는 조직특례 부여 등

- (과감한 권한이양) 지역주력산업, 주민체감 서비스, 광역행정수요 대응 등을 위해 관련 사무* 등을 선제적·포괄적으로 이양하여 자생력 강화

* (예시)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 수립 권한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특례 발굴·검토

- (인센티브 대폭 확대) 기존 인센티브(통합 전 보통교부세 보전 등)를 뛰어넘는 과감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, 이를 패키지화*하여 일괄 지원

* (재정)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교부세·소비세 추가 배분, (기타)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검토

<균형성장을 위한 ‘5극 3특’ 중심 다극체제 확립>

- (5극 육성) 5극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인센티브* 및 컨설팅 제공

* 국가사무 이양 등 권한 확대(「지방자치법」 개정, ~'26.上), 기준인건비 반영 등

- (3특 고도화) 강원·전북·제주 3대 특별자치도별 맞춤형 특례* 확대

* (예시) 강원평창올림픽 시설 양여 등, 전북스마트농업 지원 등, 제주관광업종 조례규정 등

- (특례시 제도 개선) 성장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및 신규 특례* 부여 등 특례시 실질적 권한 강화(「특례시특별법」 제정)(~'26년)

* (예시) 건축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, 개발산림보호구역 지정·관리 등

□ 지방정부의 권한 및 자율성 지속 확대

- (권한·기능 확대) 핵심 민생분야 중심 ‘제3차 지방일괄이양*’ 추진 및 지역 특성에 맞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검토
 - * (중점대상) 고용·돌봄·부동산 등 핵심 민생분야 + 장기 미이양 사무 등
- (자주재원 확충) 국세-지방세 비율 7:3 달성 목표로 지방소비세 확대 등 국세 이양*, 지방교부세율(現 19.24%) 단계적 상향 등 재원확충 추진**
 - * (예시) 지방소비세율: 부가가치세의 ^{현행}25.3%→^{개선}45% 인상 시 약 22조원 확충, 7:3 달성 가능
 - ** 「범정부 재정분권 TF」를 통해 관계부처 협의 및 실행방안 구체화('25.12.~, 국조실 협의)
- (국고보조사업 혁신) 지방비 부담 결정시 지방정부 의견수렴 의무화(「지방재정법」 개정, '26년), 실질적 포괄보조* 발굴·확대로 재정 자율성 강화
 - * 지특회계·일반회계 유사 성격 사업을 그룹화 → 그룹 내 지방정부의 사업선택권 부여
- (자치입법권 강화) 중앙부처 행정규칙에 의한 조례 제정 침해 방지 명문화 추진(「지방자치법」 개정, '26년)
- (상향식 특례 부여) 중앙정부의 일률적 특례 설계에서 벗어나, 지방정부가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특례를 발굴·건의하는 상향식 체계* 도입
 - * 특례 건의 → ^{가칭}특례심의회 심사 → 한시적 특례 부여 / 「지역맞춤형 권한이양 특별법」 제정('26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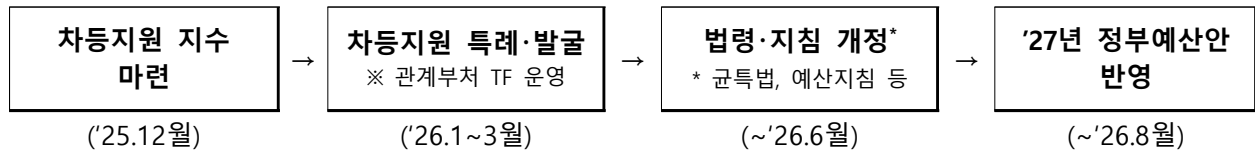
□ 주민 참여와 지역현장 중심의 자치 회복

- (주민자치회 활성화) 주민자치회 법제화('25.12월)에 따라 전면 실시 및 참고조례 개정('26.上),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연계 기능 활성화 방안* 마련('26.下)
 - * (예시)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·숙의·성과관리 쉼 과정 참여 등 / 「^{가칭}주민자치 강화 종합계획」 수립
- (주민참여제도 실질화) 투표연령 하향 등 주민소환 요건 완화*, 주민조례 발안 간소화** 및 읍·면·동장 선택 등 주민의 직접 참여 보장 확대
 - * 투표연령 하향(19→18세), 청구요건 변경(소환대상자→청구권자 총수) 등 「주민소환법」 개정('26년)
 - ** 청구권자 연대서명 기준 완화, 입안지원체계 구축 등 「주민조례발안법」 개정('26년)
- (지방의회 전문성·책임성 강화)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권한·위상 강화 및 책임성 확보 등을 규정한 독립 법률 제정 추진(「지방자치법」 분법, ~'26년)
 - 의원 외유성 국외출장 실태 분석,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 개정 등 추진('26년)
- (자치경찰제 이원화) 국가 치안역량 유지를 전제로, 치안 수요(범죄예방·청소년·교통 등)에 맞는 맞춤형 자치경찰제 확대방안 마련('26년)

□ 성과 중심으로 균형성장 지원체계 정비

- (지방우대·차등지원) 서울과의 거리^{핵심지표}, 지역의 사회·경제적 발전정도^{보완지표}를 반영한 ‘차등지원 지수’ 도입 및 재정·세제 등 쏠 분야 적용*

* (예시) 국내복귀투자보조사업(유탄기업에 대한 보조금 차등), 도시재생사업 등



- 전국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산업·물류·관광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비수도권·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우대·차등지원*('26년~)

* (예: 관광단지) 현행 전국 동일(취득세 25%감면) → 개선 수도권(10%) < 비수도권(25%) < 인구감소지역(40%)

- (지방소멸대응기금 전면 개편) 인구유입 성과 중심으로 기금 평가·배분체계* 개편, 지방의 사업기획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추진('26년~)

* (現) 시설건립 위주 단년도 계획 → (改) 인구유입 효과 있는 프로그램 위주 중장기 계획

- (인구감소지역 지정 합리화) 인구감소지역 지표 추가·보완, 자체 노력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대한 지원 유지 및 추가 인센티브* 마련('26.上)

* 「가칭인구활력*지역」으로 지정, 인증제 도입, 행·재정 지원 등 검토

□ 민간의 역량·자원을 성장엔진으로 연계

- (고향사랑기부제 혁신) 법인기부* 도입 및 주소지 제한 폐지 등 검토, 민간플랫폼 운영 자율성 확대 등을 통한 기부 활성화 도모(~'26년)

* 업종 특성, 사업장 및 납세지역 등 분석을 통해 세부 도입 방안 마련('26.上)

- (지역-기업 협업) 기업 역량을 활용, 식품사막화 등 소멸지역 난제 해결 (예시 고령층 식품 무료배송^{기아}) 및 특산물 상품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(예시 꿀고구마^{고창+롯데})

□ 국민이 행복한 기본사회 추진체계 마련

- (기반 구축) 주거·의료·돌봄 등 부처별 기본사회 정책을 총괄·조정하는 기본사회위원회 설치('26.3월) 및 기본사회 전환 지원 법률 제정 추진('26.6월)

- (기본사회 확산) 기본사회 정책 방향 등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권역별 간담회 개최, 지방정부 우수사례 발굴·확산(연중)

[공동체]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하는 「따뜻한 공동체」

① 사회연대경제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(국정과제81)

- ✓ 사회연대경제 주무부처(‘25.10월 지정)로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지원을 주도하고, 각 주체들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과 사회문제를 해결

※ 행안부 마을기업(1,726개), 기재부 협동조합(26,293개), 노동부 사회적기업(3,762개), 복부 자활기업(962개), 중부 소셜벤처(2,679개)

□ 사회연대경제 생태계의 신속한 복원

- (기반 조성) 「사회연대경제 기본법*」 제정, 가칭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구성, 종합계획 수립 및 각종 공공분야 평가 지표(지자체 합동평가 등) 반영
* 부처 간 공통 원칙·기준 및 협력체계 마련, 민간위탁 우대 및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 규정
- (범부처 통합 지원) 재정·세제(예시 재산세 감면 등)·금융·R&D·판로개척 등 패키지 지원, 다양한 부처 사업·자원 연계 기반 지역밀착형 혁신모델 발굴
- (공공서비스 위탁 활성화) 사회연대경제 조직에게 민간위탁 우대조항을 적용, 돌봄·환경정비·주거 등 공공서비스 공급주체로 육성
※ 지방정부 민간위탁 전수조사 및 가이드라인 배포(‘26.上)
- (인증체계 개선) 주관 부처 이외에도 정책 전문성을 보유한 관련 부처와 지방정부에 사회연대경제 조직 인증·취소 권한 부여 추진

(현재) 「사회적경제」(1.0)	(미래) 「사회연대경제」(2.0)
• 경제규모 미약(우리나라 고용의 1%대 수준)	•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 안착(고용자수 2배)
• 취약계층 등 일자리 창출 한정	• 돌봄·청소·주거 등 핵심서비스 공급
• 부처별 개별 지원, 전담부처 부재	• 행안부 중심 범부처 통합 지원체계
• 중앙-지방 역할 중복 발생	• 중앙-지방 역할 재정립, 효율적 운영

□ 새마을금고의 사회연대금융 기능 강화

- (공동체성 확립) 사회연대·포용 금융 강화*(MG중앙회 사회금융본부 신설, 관련 기금 출연 ~’30년누적 1,000억원), 회원대출 확대(’25.6월 28.5%→’30년 60%) 등 추진
* 사회연대경제 주체 대출 확대, 지역개발 사업 투자 및 비수도권 우대 금융지원 등
- (건전성 확보) 건전성 상시감시·합동감사 등 금융당국과 관리·감독 공조체계 강화, 연체채권 적극 정리 및 부실금고 구조조정 추진
※ 새마을금고 특별관리기간(연체율·건전성 집중관리) 운영(’25.11월~’26.6월)

2 **서로 보듬고 희망을 키우는 마을공동체 조성** (국정과제81)

□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마을공동체 모델 확산

- (기반 구축) 주민 주도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인력·조직 지원, 공간·시설 활용 특례 등을 담은 「마을공동체법」 제정('26.1분기)
- (모델 발굴·확산) ^{우선추진} 마을공동체가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하여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이익을 창출·공유하는 마을에너지모델 보급 지원(농식품부·기후부 협업, '26.上) ⇒ ^{확산} 아동돌봄, 먹거리, 보육 등 분야로 보급·확산('26.下)

유형	주요내용	사례	관계부처
마을에너지모델 (햇빛소득마을)	-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에너지 자립 및 이익 공유	구양리 '햇빛두레'	농식품부·기후부
마을아동돌봄모델	- 방과후, 방학돌봄 제공	시흥 '흥부네 책놀이터'	복지부
마을먹거리모델	- 지역의 농어민과 소비자 간 직거래로 먹거리 순환	완주 '로컬푸드'	농식품부

※ 범정부 추진단('25.12월)을 중심으로, 지방정부, 공공기관, 중간지원조직 등과 협업

□ 마을 기반 일자리·청년 유입 지원

- (마을기업 육성) 「마을기업법」 제정('25년)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('26년), 민간 유통사(^{예시}G마켓 등) 협업을 통한 판로 개척 지원('29년까지 2,500개 육성)
- (청년마을 확대) 청년층의 비수도권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마을 지정 확대('29년까지 90개) 및 ^{가칭}청년마을 인증제를 통한 사후관리('26.上)
- (주민행복마을 조성) 인구감소지역 內 생활권 자립을 위한 일자리·주거·공동체가 연계되는 집약형 마을 조성 지원(관계부처·지방정부 협업)
- (생활문제 해결) 마을세무사·마을행정사 활용, ^{가칭}마을주치의 지정 검토(복지부 협업)

□ 봉사와 나눔을 통한 연대·협력·공동체 가치 회복

- (자원봉사) '26년 '세계 자원봉사자의 해'(UN) 계기 지역 맞춤형 봉사 활동, 릴레이 나눔행사 등 '^{가칭}범국민 나눔 확산 운동' 전개('26.上)
- (^{가칭}우리동네 새단장) 중앙·지방정부·지역사회 협업*으로 지역의 주요 공간(전통시장·해안·관광지 등)을 가꾸는 자율적 실천 캠페인 추진('26.上)

* 주민자치회, 마을기업, 청년마을, 자원봉사센터, 새마을금고, 민간기업 등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체별 지원계획 수립

※ ('25년) 추석·APEC 계기 집중 추진 → ('26년) 지역별 거리·장소 중심 일상화된 실천

- (기부) 기부성과 우수사례 공유(^{가칭}나눔 임팩트 어워드 신설 등), 모집금액 사용기준 개선('26.上) 등을 통해 기부 참여기반 확대

① 생명존중사회 구현 초석 마련 [국정과제72 · 73]

□ 국민 ‘안전권’ 실질적 보장

- (안전권 명문화) 각종 재난·사고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, 신체, 재산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「생명안전기본법」 제정('26년)
 ※ 「생명안전기본법」, 「사회재난대책법」 제정과 병행하여 기존 재난안전 주요 법률 (「재난안전법」, 「자연재해대책법」) 및 전시법령 정비
- (이행력 강화) 산업재해 등 주요 안전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해 ^{가칭}국민생명안전위원회(대통령 직속) 설치 및 「생명안전 종합계획」 수립('26년)

□ 사회재난 예방·안전 관리 체계 혁신

- (법률 제정) 도시 과밀화, 다중밀집시설 대형화 등 사회재난 위험성에 맞는 정부 역할,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「사회재난대책법」 제정('26년)
- (예방·대비 강화) 고위험 지역·시설 특별관리대책 수립, 시기별* 사고 발생 전 책임기관 의무 확대 등 강화된 사회재난 관리체계 구축
 * 계절별, 대규모 축제·행사기간, 휴가철 등, 그 밖에 특별히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기
- (위험요소 제거) 국가핵심기반시설 확대(민간위탁기관 등), 특정관리 대상지역* 종합 관리 등 안전 사각지대 선제적 해소
 *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

□ 재난안전관리 전문성 강화

- (전문자격 도입) 「재해영향평가법」 제정 후 재해영향평가사* 자격 신설('26년), 공인재난관리사** 자격제도 기반 마련('28년 본격 도입)
 *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전문 수행 / ** 재난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 업무 수행
- (안전관리 강화) 기업 재난관리 범위 확대·추가* 및 인증평가단 전문인력 확대(5→30명), 시설물 안전점검 고도화(전문장비 의무 사용, '26.上)
 * 자연·사회재난 및 기술적 장애 범위 확대, 산업재해 추가
- (자원 통합관리) AI 기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시스템 고도화('26년~, 재난 자원 정보 제공), 검증된 국가재난관리 물류기업* 지정·운송 협업('26년~)
 * 재난 시 물품 긴급 운송 및 해외 의존 물품 국내 운송(한진, BGF로지스, 롯데글로벌로지스, CJ대한통운)
- (재난조직 역량 확대) 지방정부 재난안전 부서장 교육 강화(대면), 재난 안전상황실·행정복지센터 등 일선 현장 인력 확충('26년 715명 예정)
 ※ 지자체 합동평가, 재난관리평가 등 지표 반영을 통해 현장 인력확충 지원

□ 안전약자 보호 사각지대 최소화

- (어린이 안전) 안전 취약지역 CCTV 확충('26.上), 초등학교 주변 보도 없는 곳 통학로 조성(607개, '26년~), 신종 어린이시설* 안전관리 대상 추가('26년)
* (현재)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장소주택단지 학교 등 → (개선) 현행+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
- (보행안전 확보) 노인보호구역 전통시장 추가 지정(現 복지시설·공원), 구도심 이면도로 등 보행자 우선도로* 확대(연 10% 증가 목표)
*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 보행자 통행이 우선하도록 지정(현 291개소)
- (주민참여 강화) 사진만으로 자동신고 가능한 AI 안전신문고 구축(~'27년), 주민참여 안전취약지역 발굴·개선 및 점검대상* 확대('26.下)
* (현재) 집중안전점검 → (개선) 집중안전점검, 해빙기 안전점검, 물놀이 점검

□ 재난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

- (지원 확대) 복구단가 실거래가 수준 보장, 설비 등 지원 대상 확대*, 농작물 지원 시 투입 생산비까지 추가 지원('26.8월)
* 농업 신기술 활용 설비 등 추가 추진('26.6월), 지원 필요 2차간접 피해유형 연구('26년~)
- (원스톱 지원)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* 지원 기능 확대('26년), 소규모 피해 시 지방정부 자체 운영 체계 확립(조례 개정, '26.下)
* 재난 발생한 장소에 설치, 직·간접 지원 항목 및 신청절차 등 원스톱 피해지원
- (맞춤형 주거) 피해 범위 및 정도 고려 임시조립주택 다양화(3종, 단지형-공장제작형-현장조립형), 거주기간 단계별 주거시설* 제공('26.上)
* (초기) 체육관 등 집단시설 → (중기) 펜션 등 개별숙박시설 → (장기) 임시주거주택
- (재난 성금 일원화) 같은 피해(사망주택 등)임에도 자연재난(의연금)은 정액으로, 사회재난(기부금)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제도적 문제* 개선('26년)
* (사례) '25년 산청군 사망위로금의 경우, 호우는 2천만원, 산불은 4천만원 지급

□ 사회적 참사 피해자 권리 회복

- (유가족 배려) 섬세한 조사가 필요한 사회적 참사* 유가족 의견 청취 후 원인조사('25.9월), 피해구제 등 제도개선 마련 및 후속조치
* 오송 지하철도 : 본 조사(~'26.2월) / 이태원·여객기 참사: 예비조사(~'26.1월), 본조사('26.2월~)
- (독립 조사) 원인조사 투명성·전문성 강화를 위한 ^{가칭}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 설치(「생명안전기본법」 제정, '26.上), 타 조사기구와 기능 재설정('26.下~)
- (가해방지·추모) 10·29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방지대책 수립, 치유휴식 기간 연장(6→12개월), 회복 프로그램 운영, 희생자 추모 지원('26년, 시설조성 연구)

□ AI·CCTV 등 활용 과학적 재난관리

- (실시간 위험관리) 드론 취득 정보 중앙-지방 상황실 실시간 연계(4개 시·도, '26년~), 유괴 등 위험상황 탐지 AI 개발('26년, 1종) 및 민간 제공
- (맞춤형 정보) 개별 재난·안전시스템* 국민안전 24로 일원화('26년), AI 활용(사용자 위치 인식) 기상특보·대피소 등 대국민 정보전달('26년)
* 5개 시스템(국민재난안전포털, 생활안전지도, 교육플랫폼, 안전신문고, 어린이놀이시설)
- (데이터 통합) '위성-드론-CCTV' 정합 영상, 재난상황(위치기반) AI 자료 등 재난안전데이터 표준화('26년, 77억) 및 공유플랫폼으로 통합(민간 제공)

□ 극한기후 대비 예방 역량 강화

- (방재성능 상향) 기후변화 고려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상향*, 자연재난 예방·복구 시설 방재지침 통합 등 기후변화 적응형 기준 마련('26년)
* 침수 예방정책 적용 시간당 강우량, (예시) 서울시 ('22년) 50년 빈도 → ('26년) 100년 빈도
- (투자 확대) 예방활동 위한 재난교부세·소방안전교부세 선제적 지원, 풍수해 생활권·급경사지 정비 등 재난 예방시설 재정지원 확대*
* ('25년) 9,908억 원 → ('26년) 1조 1,148억 원(1,240억 ↑)
- (실전 대비) 신설 유형(지반침하 등) 매뉴얼* 마련('26.上) 및 정기 점검(2회/년), 잠재 위험 대응 READY Korea 실시(4회/년)
* (매뉴얼) 총 4종(위기관리·위기대응·현장조치·주요상황) 15,737개

□ 국민 안전 우선 대응체계 구축

- (재난문자 보완) 재난문자 중복 송출 방지 서비스 도입(시범부산·세종, '26.上 → 전국 확대, '26.下), 정보 전달 글자 수 확대(90 → 157자, '26.下)
- (신속 대피) 주민대피지원단 쏠 시·군·구 확대(현재 185개), 민방위 사이렌 재난경보까지 확대*, 지역특성 반영 주민대피 표준지침** 제정('26.下)
* 지진해일→산불호우 등 신속 대피 필요 재난 / ** 대피명령 판단 기준, 대피소대피경로 안내
- (유형별 집중 관리) 호우·대설 취약지역·시설* 중점 관리(대피·통제·정비), 폭염·한파* 취약지역 정보 정확성 제고, 산불·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체계 고도화('26년~)
* (호우) 하천재해·지하공간·산사태 취약지역, 하천·계곡 불법점용 및 빗물받이 시설 (대설) 전통시장·주거용 비닐하우스 등

□ 행정·안전 분야 미래산업 진흥·육성

- (AI·데이터산업) 'AI·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*'을 선정·개방하고, 담당자 면책·품질인증 등 **활성화 지원**(「공공데이터법」 개정 추진, '26.上)
* (~'25.12월) 선도과제 10개 개방 예정 → ('26년) 25개 → ('27년) 30개
- 「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」('25.7월~)를 통해 데이터 보유기관과 주요 기업 간 **매칭·협의를 거쳐 데이터 개방*** 지원
* 최근 사례 : 이륜차 데이터(매물량 등) 개방, 민간기업이 매매 중개 플랫폼 서비스 개발 중
- (재난안전산업*) **재난안전기업 전용 투자 펀드 조성**('26년 100억원 조성) 및 신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**재난안전산업진흥원 신설** 추진('26.下)
* (산업 규모, '23년) 매출액 59조 397억원, 사업체수 76,429개, 종사자수 476,255명
※ 진흥시설(재난유형별 성능 테스트베드, 現 4개소) 1개소 추가 공모·선정('26.上)
- (주소정보산업*) 드론·AI 산업 등에 활용될 수 있는 **산업용 주소정보 구축·개방**, 체계적 산업 육성을 위한 「주소정보산업진흥법」 제정 추진('26년)
* (산업 규모) '24년 6,714억원 → '30년 3.6조원 규모로 성장 예상

				
드론 배송 (드론배달점)	자율주행로봇 배송 (이동경로)	사물인터넷 (사물주소)	자율주행차 주차 (주차장 사물주소)	실내 내비게이션 (실내 이동경로)

□ 지역 소비 진작 및 민생 안정

- (지역 소비 진작) **지역사랑상품권** 국비지원 확대('25년 1조 → '26년 1.15조)로 발행 증대, 인구감소지역 등 **차등지원*** 및 **창의적 시책**(예시 반값여행) 연계
* (국비지원) 수도권권 3%, 비수도권 5%, 인구감소지역 7%
- (지방 고용촉진) **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시 법인지방소득세 감면**(1인당 45만원), 비수도권 **숙련인력 고용** 지원을 위해 **기업의 주민세 부담 완화***('26.1월)
*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수당을 주민세 과표에서 제외(1인당 36만원 限)
- (지방 민생규제 혁신)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**덩어리 규제** 및 지방 정부 내 **그림자규제** 등 **민생 직결 지방규제** 집중 발굴·정비, **우수사례* 확산**
* (예시) 기존 1대지 1허가 원칙에 따라, 공장부지 내 공장 동별 건축허가 불가 → 개선 1대지 내에서도 공장동별 건축허가 가능(지방규제혁신위 심의 : 국토부 수용) ⇒ 허가기간 단축 및 공사비 절감
- (생활물가 안정관리)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**바가지요금 제재 강화***, **착한 가격업소** 지원 확대(금융기관 연계한 할인혜택 지원 등)
* (예시) 숙박·음식가격 표시위반(복지부식약처), 택시 부당요금 징수(국토부) 시 제재강화 등

※ 대설·한파 겨울철 대책기간 운영 중('25.11.15.~'26.3.15.)

□ 촘촘한 폭설 대비 및 신속한 대응

- (촘촘한 대비) 대책비 특교 지원(100억원, 10.29.), 제설제·장비·인력 등 사전확보(11.15.), 결빙 등 대설 취약지역(8,761개소) 사전 예찰 강화
- (상황관리 강화) 습설예보 전국 확대 및 적설정보 제공주기 단축(1시간→10분), 강설강도 등 위험성 시·군·구별 시범안내('25.12월), 도로살얼음 정보제공* 확대
* 서산영덕선 등 5개 노선 107개소 정보제공시스템 추가 구축(총 12개 노선 366개소)
- (신속 대응) 도로살얼음 상시대응체계 가동('25.11월~), 고립 예상지역 우선대피 대상자(독거노인 등) 연락체계 구축 및 제설장비 현장 우선 배치
※ 95개 기관(수도권 25, 강원권 12, 충청권 17, 호남권 17, 영남권 24) / 제설제 예비·재살포 등

□ 한파 사각지대 없는 안전 관리

- (상황관리 철저) 중앙·지방정부 등 관계기관 간 실시간 관리체계 가동 (소통방 등), 기관 간 협력* 강화로 취약시간(야간·새벽 등) 집중 대응
* 한파쉼터 위치, 응급대피소 이용방법, 저체온 환자 대상 체온 상승 응급조치 실시 등
- (맞춤형 관리) 취약노인, 노숙인, 이동노동자 등 한파 취약자 대상 안전 확인, 난방비* 및 물품 지원, 행동요령 안내 등 적극 실시
* 에너지바우처(연 36.7만원) 지급, 경로당 난방비 지원(월 40만원, 11~3월) 등
- (인프라 지원) 한파쉼터 정확한 정보 제공(위치 등) 및 특보 시 연장 운영 (야간·휴일 등), 한파 대책비(특별교부세 50억) 교부 및 수도계량기 보온 조치

□ 고층건축물 화재안전관리 강화(홍콩 고층아파트^{11.28.} 유사사고 방지)

- (안전 점검) 고층건축물 대피로 확보 등 소방법 준수 점검*, 고층건축물 공사장(약 2,000개) 합동 표본점검('25.12월~, 노동부 협업)
* 총 6,503개(가연성 외장재 설치 101개 포함) / 긴급 223개(12.1.~12.12.), 잔여 6,280개('25.12.1.~'26.6.30.)
- (신고·홍보) 고층건축물 화재 위험요소 집중신고* 기간 운영('25.12.1.~'26.2.28., 안전신문고), 고층건축물 외국인 대상 다국어 안내문 배포('26.1월)
* (대상) 불법 적치물, 가연성 외장재 등 / (포상) 국민신고 우수사례 포상금 지급('26.上)
- (화재 훈련) 고층건축물 화재 진압·대피 범정부 합동 훈련('26년, 1회 이상), 지방정부 안전한국훈련 시 고층건축물 화재훈련 중점 추진('26년)

IV. 주요 쟁점이슈

① 인구감소지역 지정 합리화

□ 재지정 관련 고려사항

-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기한('26.10.19.)이 도래함에 따라, 지방정부와 주민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 기준 마련·제시 필요

< 인구감소(관심)지역 지정 개요 >

- (지정대상) 226개 시·군·구, 세종특별자치시,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2개 행정시
※ 현재 89개 인구감소지역('21.10월~'26.10월) 및 18개 관심지역 지정
- (지정주기) 「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」에 따라 **5년마다 지정**(최초지정: '21.10월)
- (지정절차) 지방시대추진심의회 심의·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이 지정·고시

- 인구감소·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이 행·재정적 지원 축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안 마련 필요

□ 추진 방향

- (지표 추가·보완) 인구감소지역 지정 취지*를 고려, 인구 관련 지표들을 합리적으로 수정·보완하고, 지역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지표 추가 추진
*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인구위기·지방소멸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구정책 추진 필요
- (제외지역 지원) 지방정부 노력에 따른 인구 증가 등으로 인구감소(관심) 지역에서 제외된 경우 ^{5년간}지위 연장 및 현재 지원 수준 유지* 검토
* 행정·세제 특례 및 기금 배분 수준 유지,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공모사업 가점 부여 등
- (추가 인센티브) 제외지역을 「^{가칭}인구활력*지역」으로 지정 및 인증제 도입 (정부포상 등), 행·재정적(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우대 등) 추가 지원 검토

□ 향후 계획

- 권역별 간담회 등을 통한 지방정부 의견 수렴을 거쳐 인구감소(관심)지역 지정(안) 마련('26.上) 및 지정·고시(~'26.10월)

2 국민 재난성금 일원화

□ 국민 재난성금 제도 현황 및 문제점

- (현황) 재난 시의 국민 성금은 자연재난*의 경우 「재해구호법」상 의연금으로, 사회재난**은 「기부금품법」상 기부금으로 지급

* (자연재난) 태풍, 호우, 지진, 대설 등 / ** (사회재난) 산불, 여객기·이태원 참사, 건물화재 등

- (문제점) 유사한 피해(인명, 주택 등)를 입더라도 재난 유형에 따라 성금 지급액이 달라* 피해자 입장에서 차별적임

* (자연재난) 「재해구호법」에 따른 의연금은 기준에 따라 정액 지급

(사회재난) 「기부금품법」에 따른 기부금은 피해 대비 모금액에 따라 변동 지급

□ 개선방향 및 검토 필요사항

- (추진방향) 재난 유형(자연, 사회)에 관계없이 같은 피해(인명, 주택 전파 등)에 같은 금액이 지급되도록 국민 성금제도 일원화 추진
- (검토사항)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, 모금기관, 민간 전문가 등 충분한 논의 필요

< 통합 운영 추진 시 필요 조치 사항 >

- ① (모금기관 의견 청취) 현재 기부금의 배분 권한은 모금기관의 고유 권한이며, 이를 일원화할 경우 배분 권한의 조정이 필요하므로 의견 청취
- ② (기부자 의사 반영) 동일 기준으로 지급시 잔여성금을 적립하여 다른 재난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, 이와 관련하여 기부자의 의사 반영
- ③ (피해사각지대 해소 대책) 사회재난 특성상 피해 유형이 광범위하여 기준이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성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이에 따른 대책 마련
- ④ (적립된 성금 투명성 확보 방안) 성금 사용 후 잔액 적립시 성금의 투명성 있는 관리를 위해 감독기관의 관리·감독 권한 강화 방안 마련

□ 향후 계획

- 공청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연구용역, 전문가 자문,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제도 마련 추진('26년)